

2004. 7. 14(水)

第26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 제 : 한국경제 희망찾기
- 개혁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 데서 찾아야
- 연 사 : 좌 승희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1. 문제제기: 그 동안의 개혁, 성공했는가?

요즘 한국은 마치 개혁 조급증·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넘쳐나는 개혁주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 동안 지나치게 성장에 몰두해 왔으니 이제 분배에 보다 치중하여 그늘진 곳의 사람들 그리고 보다 낙후된 지역과 산업, 기업부문에 보다 혜택이 가는 경제·사회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듯 하다. 그래서 보다 균형있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듯하다. 이에 필요하다면 기존질서를 바꿔 현재의 기득권층을 새로운 세력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듯하다.

“경제적으로 보다 균형있고 평등한 사회”는 인류가 추구해온 오랜 이상이다. 우리나라 또한 1980년대 후반이후 이러한 이상을 헌법상의 경제기본질서로 천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균형과 평등을 지향하는 지금의 이 개혁의 소용돌이는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지향한 경제개혁의 깃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87년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법 제11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초기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활동한, 국내 경제학계를 망라했던 “경제 구조조정 자문회의”의 최종보고서인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구상”이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선진화 방향 또한 헌법 제119조 2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 보고서는 국내산업구조조정과 경제선진화를 위한 대책으로 경제력집중의 완화, 농업구조의 혁신, 분배개선과 사회적 형평의 제고,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균형, 형평, 경제민주화를 지향한지 어언 15년여의 세월

이 흘렀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개혁의 깃발을 드높이고 있는 셈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도 사실은 형평의 논리위에서 보다 균형된 경제·사회를 지향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지방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방분권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의 억제 속에 지방대를 육성하려는 정책, 노사평등의 논리위에 노조의 경영참여를 지향하는 21세기 노사관계 로드맵, 대기업규제를 지속하면서 중소기업의 입지를 높이려는 21세기 시장개혁 로드맵, FTA에 대비한 119조의 농업지원 계획 등등은 지난 15년여의 기간동안 추진해온 사회적 형평과 균형을 지향한 정책패러다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최근 민노당이 내걸고 있는 부유세 도입 주장은 이러한 어떤 정책들보다도 훨씬 더 앞선 평등사회의 이상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지난 15년여 동안 추진해온 정책패러다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이 맞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첫째는 지난 15년여 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정책목표, 즉 사회적 형평과 균형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되어 왔다는 가정이다. 둘째는 따라서 좀더 노력하면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미흡했던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 번째 가정은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볼 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따라서 두 번째 가정 또한 옳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필자는 최근 지난 15년여 동안 한국경제가 걸어온 개혁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사회적 형평과 균형, 평등의 이상을 지향한 정책들이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1)

우선, 1980년대 후반이후 경제선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을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오히려 더 약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1인당

1) 상세한 내용은 줄고, “한국경제 10大 불가사의”(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keri.org)

참조

GDP는 1만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져 88년 이전기간(70~87)의 제조업부문의 자기자본경상이익률과 매출액경상이익률은 각각 15.0%와 3.0%이었으나 그 이후기간(88~2002)에는 그 수치가 각각 6.8%와 1.8%로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고 산업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미래산업 창출노력은 실종되었다.

그리고 노사평등 및 화합을 강조해온 경영민주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1987년에 비해 1997년에는 노사분규 건당 손실일수는 3.1배(87년 1,853일→97년 5,702일), 노사분규 건당 생산차질액은 51.9배(87년 7.4억원→97년 383.7억원)나 증가했으며 노사분규손실일당 생산차질액도 약 17배(87년 40만원→97년에는 670만원) 상승하였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다. 그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은 85년 GDP의 42%에서 2002년 47.7%로, 인구 역시 85년 39.1%에서 2002년 46.7%로 증가하였다. 또한 도·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 WTO 가입이후 농촌구조조정을 위한 52조 이상의 농촌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도시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중은 1995년 95.1%에서 2002년 73.0%로 크게 떨어지고, 농가빈곤율도 도시빈곤율에 비해 1999년 1.9배에서 2001년 2.7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또한 농가호당 부채는 1995년 9백만원에서 2002년 2천만원 가까이로 증가했으며, 농가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995년 42%에서 2002년 81.3%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이상에서 추진된 경제력집중억제와 균형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전산업에서 30대 대그룹, 5대 대그룹 그리고 제1 대그룹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86년 각각 39.3%, 21.7%, 4.7%에서 2001년에는 51.5%, 25.0%, 9.0%로 각각 증가하였다.

관련하여 대기업규제 속에 추진된 중소기업보호·육성정책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소기업육성의 필요성은 경제균형발전과 동시에 기계,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

업경쟁력 향상과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계산업의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1987년 68억달러에서 1997년 97.7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전산업의 대일 무역적자는 1987년 52.2억달러에서 1997년 130.6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 개선 이후 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 경제의 소재·부품 외국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의 외화가득률은 1995년 69.8%를 정점으로, 2000년 63.3%를 기록해 20년 전 수준(1980년 63.1%)으로 악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이상인 형평과 분배지향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 소득분포에 따른 가구분포를 보면 상류층은 1994년 21%에서 2001년 22.7%로 증가하였고, 중산층은 같은 기간에 70.2%에서 65.3%로 크게 낮아졌으며, 빈곤층은 같은 기간에 8.8%에서 12.0%로 크게 늘어났다. 지니계수에 의해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까지 꾸준히 호전되다가 90년대 중반에는 정체 혹은 다소 악화되고, 99년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경제민주화, 균형성장, 분배정의의 기치아래 시행된 각종 개혁조치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투적인 생각(Conventional Wisdom)”, 즉 “민주, 평등, 균형”과 같이 뜻과 이상만 좋으면 그 방법은 무엇이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심각한 고민도 없이 그저 늘 하던 대로 개혁을 외쳐왔고 또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그러면 올바른 개혁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 동안의 개혁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와 진정한 개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사회의 발전원리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2. 경제·사회발전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1)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의 원리

경제·사회발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소위 시장이라고 하는 장치의 기능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시장이란 열심히 잘하는 경제주체 즉, 스스로 돕는 자와 그렇지 않은 경제주체를 차별화하여 스스로 돕는 경제주체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집중시켜주는 장치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시장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장치인 것이다. 시장에는 요즘 말로 주주, 채권자,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와 같은 하느님들이 있어서 이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경제주체들을 평가하여 차별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발전이란 이러한 시장의 차별화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엄격히 이루어져 스스로 돕는 경제주체가 더 더욱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다.

경제발전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열심히 해서 스스로 돕는 자가 앞서고 그렇지 못한 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돕는 자에게 경제적 자원과 활동이 집적 혹은 집중되어야만 한다. 경제발전이란 잘하는 대기업, 잘하는 지역, 잘하는 근로자, 잘하는 농가, 잘하는 중소기업, 잘하는 대학이 더 잘되고 이러한 변화가 나머지 모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이들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추월하기 위해 스스로 돕도록 유인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의 삶이 향상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경제활동과 자원의 집적과 집중과정을 의미하게 되고,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는 지나친 분산, 형평, 균형정책은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형평, 균형을 추구를 통한 결과의 평등은 대단히 고귀한 이상이긴 하지만 경제발전이란 현실적 시각에서 보면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절대평등의 이상을 추구하는 민주정치이념에 맞춘다는 것으로 경제발전과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다. 민주주

의는 원래 법앞의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1인 1표의 보통선거제도 때는 때때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원치 않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경제원리는 차별화를 통해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는 반면 민주정치는 다른 것을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절대평등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기회평등의 민주주의는 기회는 균등하지만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시장결과의 불평등은 수용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차별화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세계석학들로 하여금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추구에 있다는 주장을 하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극단적인 형태인 사회주의로 오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장경제와는 항상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달리 해석하기도 어렵지만—결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란 어느 경우에도 민주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사회발전의 이치란 열심히 스스로 돕는 자가 우대받는 사회만이 모든 국민을 잘 살기 경쟁에 몰입시킴으로써 높은 역동성과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2) 경제개혁의 결과가 기대에 미흡한 이유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경제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개혁의 목표 자체가 경제발전의 원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달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무리해서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① 경제선진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개혁

그러면 우선 경제발전의 원리측면에서 볼 때 소위 한강의 기적을 가

저온 개발연대의 경제적 성공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은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소위 “관치에 의한 차별화” 패러다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수출을 진흥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 돕는 자가 대접을 받도록 정책을 운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발전 원리를 충실히 따른 셈이 되었다. 관치에 의한 차별화가 “관치” 때문에 정경유착, 부패, 지대추구, 승복하지 않는 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긴 했지만 “차별화 원리”가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1980년대 후반 개발연대 패러다임의 청산 노력은, “관치”는 청산하되 “차별화”는 유지하는 방향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개혁은 관치는 버리지 못한 체 차별화 원리만 버리는, 반차별화 개혁 즉,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형평, 균형, 경제민주화 개혁을 추구하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원리에 역행하는 “관치평등화” 패러다임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반차별화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역차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력갱생의 의지를 꺾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음과 동시에 스스로 도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동안 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간 셈이 되었다.

② 경영민주화 개혁

한편 87년 민주화 이후 경영민주화가 노사관계 개혁의 화두가 되어 왔으나 기대한 노사평화를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 기업은 CEO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명령조직이며, 바로 이 점이 기업을 자본주의시장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기업에 CEO가 둘 있다면 이는 두 사람의 대통령, 두 사람의 사령관을 갖는 것과 같다. 경영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CEO와 근로자가 경영권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경제원리보다 다른 것을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정치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동 3권의 보장 등이 너무나 당연한 관심사이지만 경영을 민주화하여 경영권을 분점한다는 것은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어떠한 노사 대타협도 이러한 기업의 본질에 대한 공

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지역균형 및 도·농균형정책

또한 지역균형과 도·농 균형발전이 1987년 이후 경제개혁의 화두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을 균형발전시킨다는 이름하에 서울이외 모든 지역을 균형있게 키우다 보니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거점화와 집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살만한 곳은 서울 강남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대학육성정책은 서울소재 대학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대학을 지속적으로 종합대학으로 확장시켰으나, 발전의 원리인 집중에 실패함으로써 대학산업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서울대학이 세계 1류대학이 되는 과정이 바로 한국대학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농업지원정책의 경우도 도시에 비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농가들을 스스로 돕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차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다 선진농가를 만들려다 이들 농가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했다.

④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규제와 중소기업육성정책

대기업규제와 중소기업육성정책도 반차별화, 역차별 논리에 빠져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들의 외형성장을 막아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넓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반차별화 균형정책은 발전의 집적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자본재와 부품의 공급자로서의 중소기업과 수요자로서의 대기업간의 유기적 관계를 무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경제의 발전과정은 한편 집적을 가져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참여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집적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보다는 잘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그룹이라도 서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발전에 득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을 단지 30대 안에 든다는 즉,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하고, 중소기업은 잘하나 못하나 차별화하지 않고 약자이기 때문에 모두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시장경제발전의 원리에 정

반대되는 특이한 기업정책을 운영해온 것이다. 출자규제로 신분야 진출이 막힘으로써 여러 분야에 새로운 대기업들의 역동적 참여와 경쟁의 길이 막혀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은 사실상 더 심화되었다. 한편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규제에 따른 시장제약 때문에 그리고 획일적 지원 속에 도덕적 해이에 빠져 그 경쟁력은 더 약화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의 역동성,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 불행하게도 고소득층보다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냉엄한 경제현실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악화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자칫 상위 50%계층 인구는 일할 맛, 살맛이 안 나게, 하위 50%계층 인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더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3. 개혁의 원리: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

그러면 그 동안의 개혁의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의 역동성을 살려내고 한국경제를 하루 빨리 선진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개혁의 원리는 무엇인가? 답은 한마디로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시장경제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기업,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업을 차별화하는 장치라고 했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열심히 싸워 성과(판매수익)를 많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더 많은 소비자, 더 많은 투자자, 더 많은 은행으로부터 투표(지원)를 받게 되고 더 좋은 근로자를 유인함으로써 승승장구하게 된다. 후발주자들은 선발주자의 전략을 베끼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1등의 자리를 빼앗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이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이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1등과 꼴찌(파산하는 개인이나 기업)가 있기 마련이며,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장치인 것

이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세상사는 이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하느님도, 세상도, 시장도 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결국은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며 서열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원리가 모든 사람을 보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이와 같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인생항로를 달려가는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차이가 있더라도 다 같이 더 잘 달릴 마음이 생기도록 하여 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세상의 이치가 싫다하여 평등이라는 높은 이상으로 다 같이 나란히 달리도록, 그래서 더 잘 달릴 마음이 우러나지 않도록 하여 결국은 모두 다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는 삼척동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명약관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이란 “스스로 돕는 자가 도움을 받도록”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어, 스스로 돕는 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맛이 나고 그래서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잘살기 경쟁에 몰입시킴으로써 모두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마라톤과 같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달려가는 세상의 이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경기 중에 기회균등(법앞의 평등)의 원칙을 확고히 하되 경기종료시 결과의 불평등(분배의 불평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누구나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경기 중에 동료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엄히 만들고 감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회의 균등이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나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경기에 참여해서 “동등한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등한 참여자격을 넘어 대등한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다름아닌 결과의 균등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물론 필요하면 힘과 능력의 현격한 차이 즉, 세상의 다양성을 감안하기 위해 체급이나 성별에 따라 경기를 달리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등화된 경기에서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도록 하는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면 분배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정치적 이상은 될 수 있으나 실현할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즉,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분배의 불평등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각 개인이 분배의 사다리 중 일정 위치에 영원히 고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이치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가는 사람이 영원히 앞서가지 못한다는, 뒤쳐진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뒤쳐지기만 하지 않는다는 이치이다. 따라서 올바른 분배정책이란 모든 경기참여자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이들이 마음껏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역량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똑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개혁이라고 해서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뒤쳐진 사람들을 보살핌에 있어서도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개혁은 국민들을 스스로 돕지 않는 실패한 국민이 되도록 만들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획일적인 산술적 평등을 추구하는 지역균형정책,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하는 교육평준화정책, 경영민주화 논리위에 노조의 경영참여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정책, 열심히 해서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획일적 대기업규제정책, 약하기 때문만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중소기업보호정책과 농업보호정책, “약한” 지방대학을 돕기 위한 국립대학평준화정책,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죄” 때문만으로 내야하는 부동산과다 보유세나 부유세 등등은 자칫하면 스스로 돕는 자를 역차별하거나,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는 “반개혁적”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4. 결어: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의 지킴이어야 한다.

개혁이 “민주, 형평, 평등, 균형”이라는 아무리 좋은 뜻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물론 세계역사의 경험이다. 좋은 뜻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정부는 언제나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서도 안되며, 지나친 자비로 국민들의 나태함을 조장해서도 안된다. 예컨대 성공했던 정치인이나 공직자 그리고 사회지도층, 대기업이나 부자들 심지어는 서울 강남 사람들까지를 소위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층이라는 이름하에 폄하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역으로 그늘지고 낙후된 곳에 있다는 이유때문만으로 정부가 농민의 요구, 근로자의 요구, 실업자의 요구, 중소기업의 요구, 교사의 요구, 학생의 요구, 지방의 요구에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응하고 돕고자 한다면 국민의 자율과 책임의식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으로 만들 것이 자명한 것이다. 이는 결국 실패하는 국민을 양산하는 길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생각과 행동은 정부에 의해 길러진다. 정부가 매사에 국민의 아픈 곳을 살펴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까지 가르쳐 주게 되면, 국민은 정부의존적이 되어간다. 인생의 성공은 내 잘한 탓이고, 실패는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국민이 되기 쉽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스스로 돕는” 정신은 사라지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지새는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백성의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사회안전망이 부실하여 음지의 국민을 살피는 일에 더 배려를 해야 하겠지만 단지 그늘진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와서는 안되며 스스로 돕는 자에게 더 배려가 가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정부 또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개혁과 잘못된 개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2004. 7. 14

좌 승 희
한국경제연구원장

*) 이 자료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좌승희, 2003)” 에서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T.3771-0004나 shi@keri.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1. 한국경제의 현 좌표: 성장의 장기정체 지속

- 1) 60년 이후의 GDP 증가율과 장기추세선
-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 3) 상장회사(전체) 수익성 지표 추이

2.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3. 시장경제의 본질

4. 경제발전의 원리

5.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경제발전의 시사

6. 한국경제의 이륙(Take-off): 관치차별화 정책

7. 1980년대 후반('87~'88)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원인: 관치평등주의 개혁

8. 향후 가야 할 길: 시장차별화

9.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과제

- 1) 헌법상의 경제장(제9장)의 개정: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 조항의 철폐
- 2)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이념의 탈피
- 3) 공정거래법의 환골탈태: 경제력집중규제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
- 4) 기타 경제·사회부문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정책의 개혁

10. 결어

- 1) 불균형은 불균형정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 2)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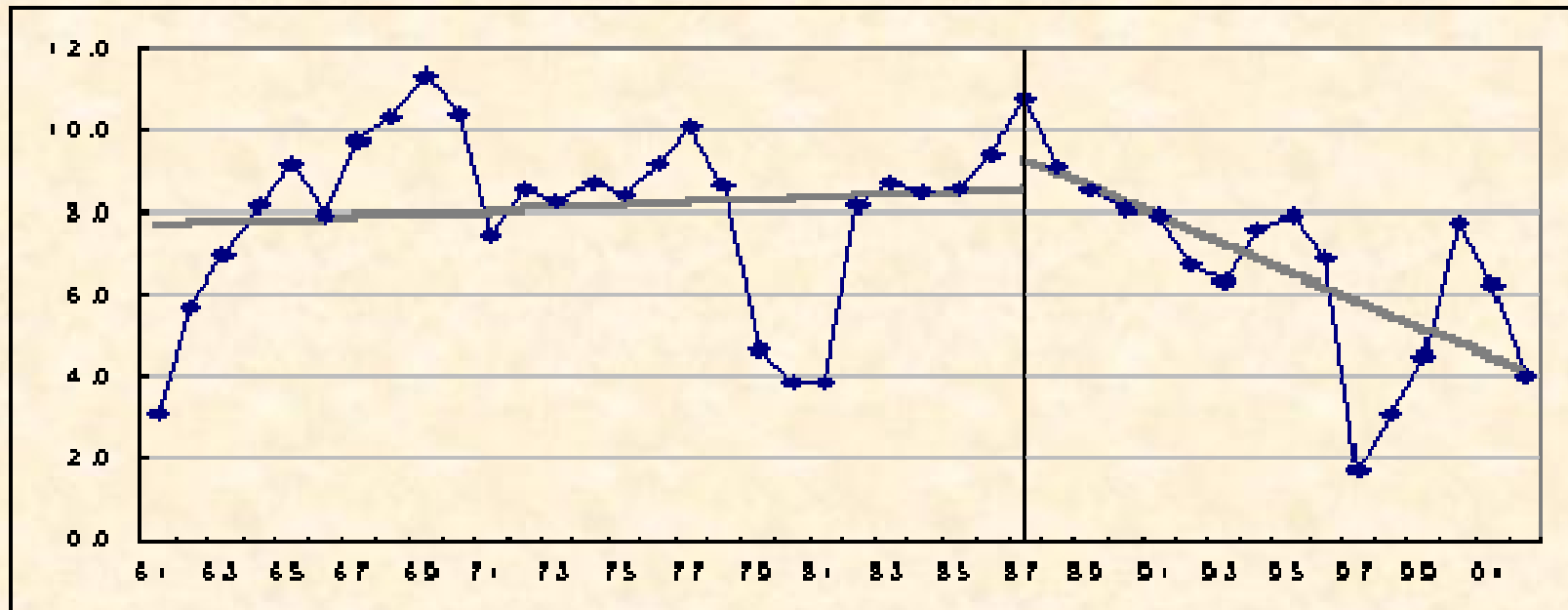
▣ 부록: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1. 한국경제의 현 좌표: 성장의 장기정체 지속

1) 60년 이후의 GDP 증가율과 장기추세선

- ❖ 80년대 후반 이후 GDP 증가율의 단기 고점과 저점이 모두 하락 추세
- ❖ 장기추세선도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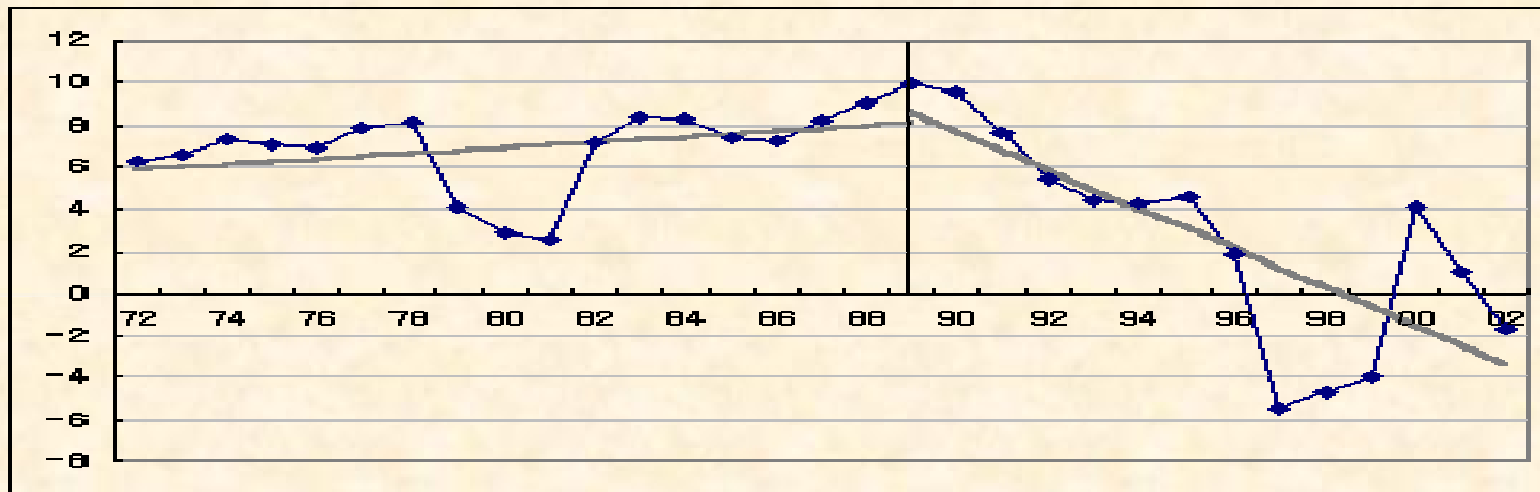
<GDP증가율(3년 이동평균)과 장기추세선>



주: GDP증가율을 3년 이동평균한 시계열에 대하여 61~87년과 87~2002년으로 분리하여 추세선을 추정하였음. 87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분리한 이유는 매년 추세선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87년이 정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두 기간의 추세선 기울기는 1961~1987년 기간에는 0.032(t 값=0.5946), 1987~2002년에는 -0.348(t 값=3.6856)로 추정됨.

❖ 내수부문의 장기추세선은 더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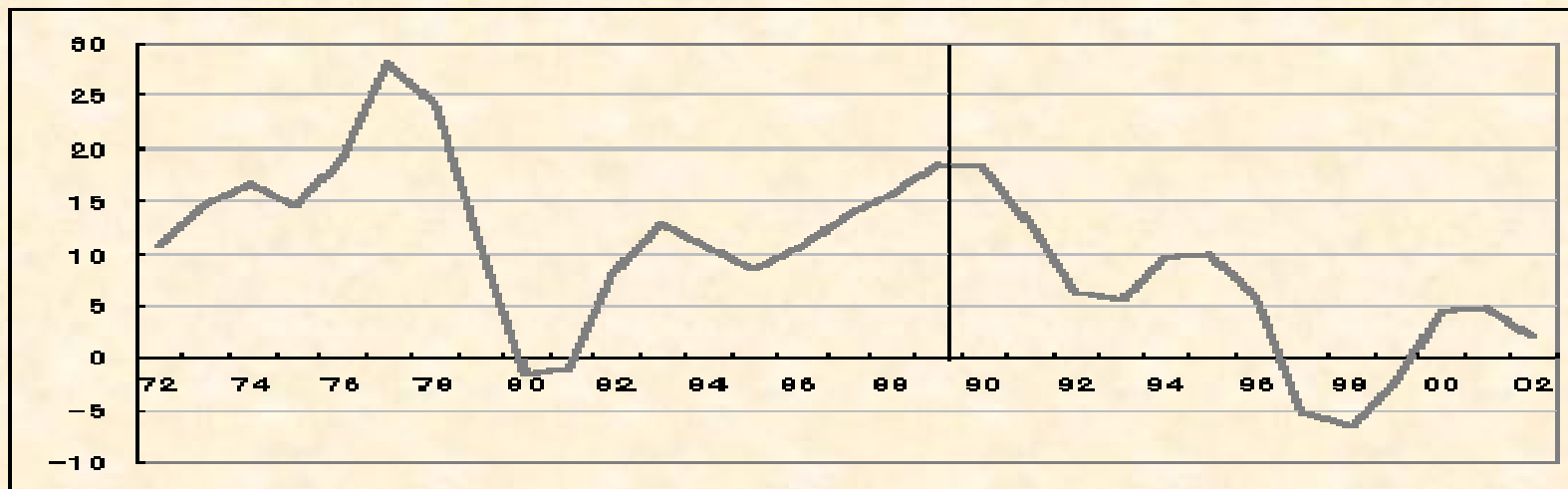
<내수(GDP-수출)증가율(3년 이동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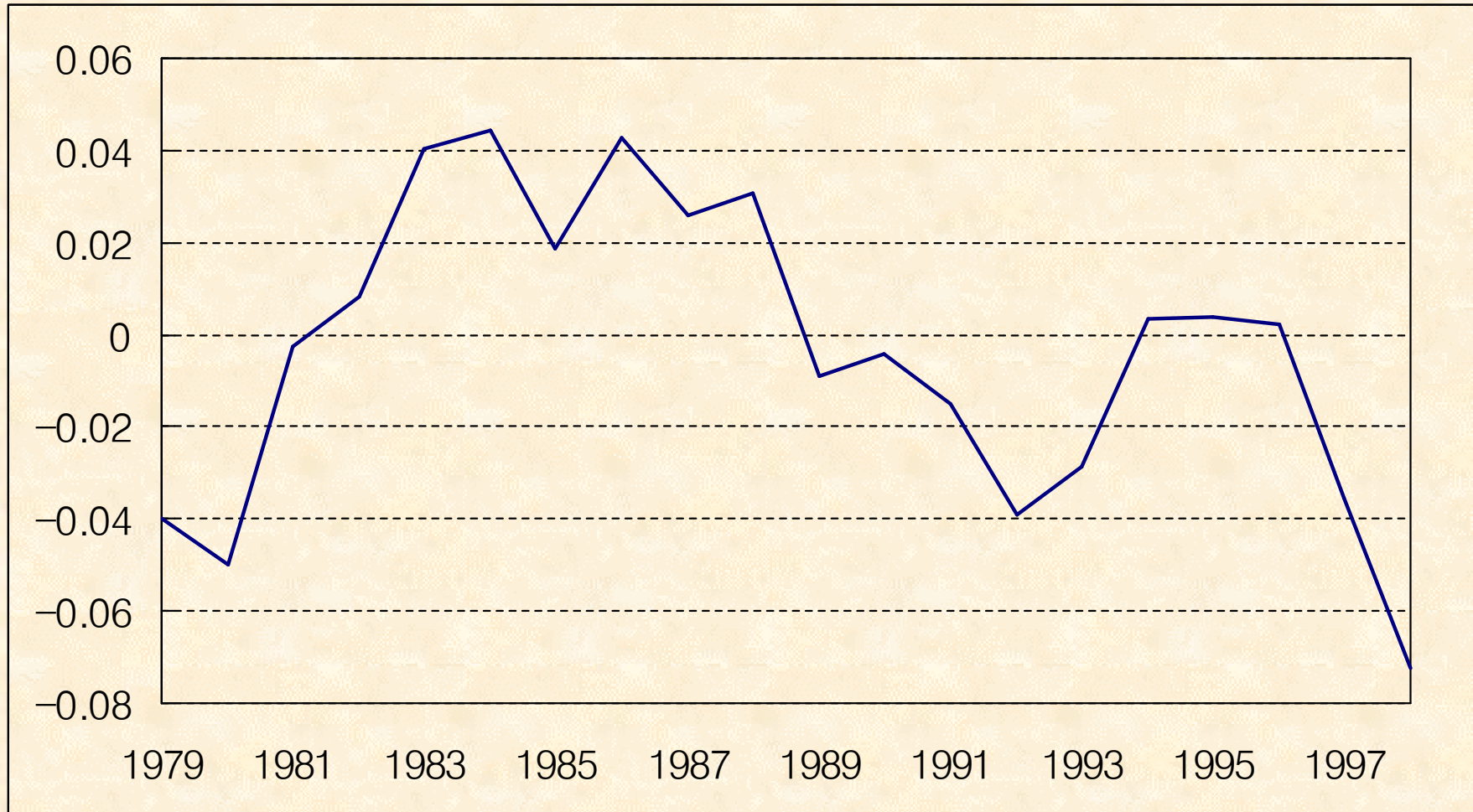
주: 추세선 기울기는 1972~1989년 기간에는 0.134(t값=1.5556),
1989~2002년에는 -0.923(t값=4.1199)임.

❖ 고정투자 증가율도 80년대말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

<고정투자 증가율(3년 이동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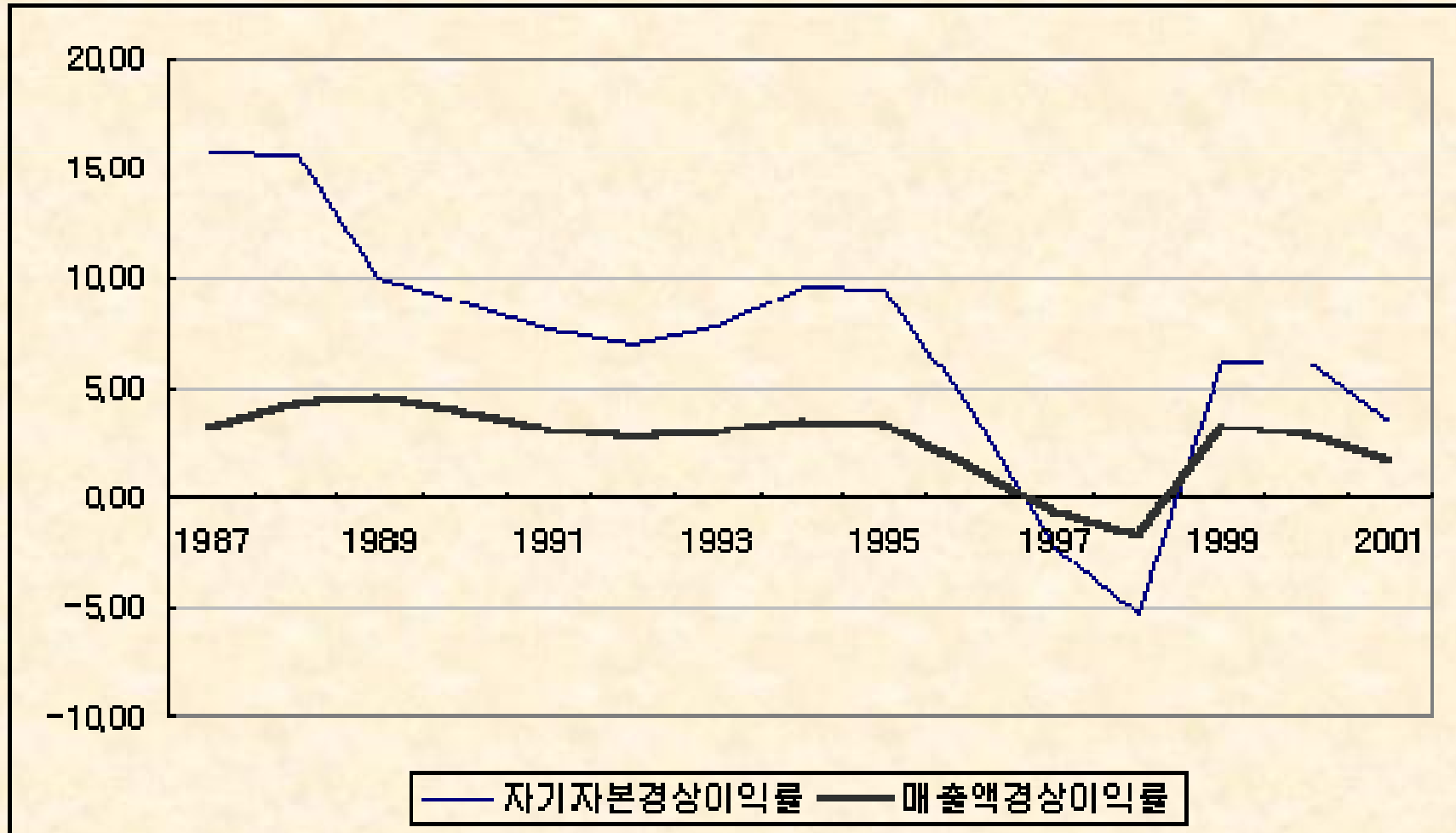


2) 중요소생산성 추세변화



자료: 표학길, 『한중일 중요소생산성 측정 및 비교』, 한국생산성본부/서울대 경제연구소, 2003.

3) 상장회사(전체) 수익성 지표 추이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총람』 각년도

2.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

➤ 좋은 뜻: 헌법 제9차 개정(1987.10.29)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불가사의 1]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 기조 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 <작은 불가사의> ① 균형 및 질적 성장을 추구해온 경제개혁 속에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 ② 기업경쟁력강화정책 속에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 ③ 노사평등 및 화합을 강조해온 경영민주화정책 속에 노사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불가사의 2]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다.

- <작은 불가사의> 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대학육성정책 속에 지방대학은 이제 1郡 1종합대학체제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실종되고 지방대 졸업생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불가사의 3] 도·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해해졌다.

[불가사의 4]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력집중억제와 균형성장정책 속에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되었다.

[불가사의 5] 대기업규제 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약화시켰다.

[불가사의 6] 형평과 분배지향정책 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다.

[불가사의 7] 균등교육기회를 지향하는 교육평준화 속에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은 더 늘어났고 서울 강남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은 더 증가하였다.

- <작은 불가사의> ① 대학교육기회의 확대와 하향 평준화된 교육 속에, 고학력 대졸자들은 양산되었으나 학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② 이공계대학 육성지원정책은 오히려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을 앗아갔다.

[불가사의 8] 금융자유화 주창 속에 관치금융은 더 심화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했다.

<작은 불가사의>

- ①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행소유분산 정책 속에 은행의 편중대출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 ② 은행산업으로의 자본유입을 막아 은행산업의 피해를 초래한 지나친 소유분산정책을 비은행권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 ③ 소위 불건전자본(산업자본 포함)의 금융업 지배를 막기 위한 소유분산정책 속에 성격도 불분명한 해외펀드의 은행지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④ 금융의 안전·건전성을 높인다는 건전성 규제강화(8% BIS비율규제, 편중대출방지규제)와 기업에 대한 200% 부채비율규제는 기업금융 고사 속에 가계 및 카드부채의 급증을 초래했고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를 열었다.
- ⑤ 외환위기 이후 systemic risk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개입정책(개별금융기관 살리기)은 오히려 잠재적 systemic risk를 확대·지속시키고 있다.
- ⑥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개편이 한국경제의 최종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 기능의 실종을 가져왔다.

[불가사의 9] 개혁·청산대상인 60~70년대의 개발연대 패러다임이 한국경제의 도약, 즉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불가사의 10]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그리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3. 시장경제의 본질

-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장경제란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하여 잘하는 주체를 더 격려·지원해 주는 장치 ➡ 시장은 차별화 장치
 - 시장은 하느님과 같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시장은 소비자, 주주(투자자), 채권자 등이 구매력(돈)을 가지고 선호하는 기업에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함 ➡ 구매력의 과다가 시장경제에서의 영향력 결정
 - 또한 시장은 대단히 부지런하다: 매순간 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재평가하여 차별화 ➡ 주가의 변동
 - 시장의 실패란 시장의 차별화기능 고장을 의미 ➡ 정부의 개입은 시장차별화 기능의 복원이어야 함.
-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개혁” 이란 이러한 차별화 장치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각종 경제제도를 개선·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

4. 경제발전의 원리

- 경제발전이란 차별화과정을 통해 스스로 돕는 자가 더 우대를 받음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소득의 상승을 가져오는 과정임.
 - 따라서 경제발전은 수직적 진화과정이며,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차별화 원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
-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면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보다 잘하는 경제주체가 그 만큼 더 보상받도록 개혁해야 함 ➡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수용할 줄 알아야 경제발전
 - 차별화가 강화될수록 발전 심화: 등소평의 先富論

- 결국 경제발전은 차별화를 통한 집적(集積)과 집중(集中)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경제의 발전은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지역, 열심히 하는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과정으로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됨.
-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반차별화, 즉 획일주의(Uniformity), 집단주의(Collectivism),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경제발전에 역행.

5.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경제발전에서의 시사

- 민주주의의 이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추구 ➡ 시장경제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 한편, 민주주의는 1인 1표에 의한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평등”의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제도
 - 구매력에 관계없이 같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의견이 평등하게 반영 ➡ 경제적 포퓰리즘의 온상이 될 우려.
-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는 시장경제 발달에 역행
- 시장경제가 차별화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반차별화 지향

- 시장경제는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며,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님.
- 결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것을 다르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다르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
- 이에 따라 결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가 경제에 우선하게 되면, 경제를 민주화(평등화)하려는 경향이 생겨, 시장경제의 차별화기능이 약화되고, 경제발전이 정체되게 됨.
 - 민주주의 이념이 평등주의로 흘러 시장경제에 우선할 경우 경제운영이 경제민주화와 반차별화로 흐르게 함.
 -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영국병, 남미병, 유럽의 복지병, 독일의 경제침체, 일본의 장기경제침체 등이 바로 차별화의 약화에 따른 부작용의 예임.

〈인류진화와 경제발전 원리의 비교〉

	인류진화	경제발전			
		시장경제		산업정책(계획경제)	
포식자	맹 수	시장의 각종 이해당사자들		정 부	
피포식자	유인원	기업		기업	
진화/발전 의 전략	차별화	차별화	평등주의	차별화	평등주의
결과	직립원인 (homo- erectus)의 탄생	기업과 경제의 성장: 경제의 take-off	기업과 경제성 장의 정체	기업과 경제의 성장: 경제의 take-off	기업과 경제성 장의 정체
부작용	.	.	.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지 대추구, 승복하지 않는 다수의 패 자 양산	

6. 한국경제의 이륙(Take-off): 관치차별화 정책

-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책
 - 수출진흥정책: 잘하는 기업만 지원 ➡ 모든 기업을 수출전선에 몰입시킴.
 - 새마을운동: 잘하는 새마을만 지원 ➡ 모든 마을을 새마을운동의 경쟁에 몰입시킴.
 - 원호대상자지원정책: 자조하는 대상자만 지원
- 관치차별화 정책의 부작용: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지대추구, 승복하지 않는 다수의 패자 양산

7. 1980년대 후반('87~'88)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 원인: 관치평등주의 개혁

- 균형성장, 적정소득분배, 경제력집중규제, 경제민주화의 추구: 관치평등주의 개혁의 시작
- 차별화를 부정하는 정책사례: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역차별
 - 30대그룹에 대한 획일적 특별 규제/ systematically penalizing the best performers: 열심히 해서 30위 안에 들면 무조건 특별규제 대상
 - 대기업 규제속에서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규제는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잠식
 - 교육평준화 강화
 -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勞와 使는 다른데도 평등하게 취급
 -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농업지원정책, 지방대학육성정책, 공과대학육성정책, 지방균형발전정책

- “Global Standards” 이름하의 국민의 정부의 획일적 기업·금융개혁
 -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하에 언필칭 응능주의(應能主義)적 규제 양산: 역차별규제정책의 전형
 - 200% D/E ratio: D/E 유용성 상실/ 시장차별화기능 상실
 - 8% BIS ratio: BIS ratio의 유용성 상실/ 시장차별화기능 상실
 - 기업내부구조(Corporate structure),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제도(BOD)등에 대한 획일적 규제(Uniform standard)/ 시장차별화 기능의 상실
 - 집단주의적 구조조정/ 시장차별화 기능의 상실

- 최근 평등주의적 정책논의의 예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균형발전 정책
 - 부동산 과다 보유세 신설
 - 획일적인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
 - 민노당의 부유세 도입 주장

8. 향후 가야 할 길: 시장차별화

<한국의 경제발전전략 로드맵>



9.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과제

1) 헌법상의 경제장(제9장)의 개정: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 조항의 철폐

- 민주주의는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시장경제는 차별화를 기초로 함: 시장경제의 본질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데 있는데 반해 정치는 다른 것을 다르지 않게 하는데 있음.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절대평등사상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선언
-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

2)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이념의 탈피

- 기업은 하나의 CEO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명령조직으로 경영권은 CEO의 몫임. 세계유수의 기업은 모두 강한 CEO를 가진 기업 ➡ 경영권의 민주적 분점은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업성장에 치명적

<시장과 기업의 차이>

	기원(Origin)	이점(Benefit)	운영원리 ²⁾	투명성 조건 ⁵⁾	동양사상
시장	사람간의 자연스런 거래 능력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Gains from trade)	상호간 협상과 합의, 민주적 수평관계	거래조건(terms of trade)의 높은 투명성	老子の 無爲自然: 다양성, 자율
기업	시장거래에 수반하는 “거래비용”을 절약 ¹⁾	경제전체의 비용절감	수직적 명령체계 ^{3),4)} (Command, administrative system)	태생적으로 불투명한 거래 내부화	孔子: 도덕율, 중용

- 시사점: 1) 시장효율성↓→거래비용↑→“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규모↑/재벌의 존재 이유
- 2)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운영의 명령체계화나 기업경영의 민주적 합의 및 수평적 관계화는 각각의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
- 3) 강한 leadership의 CEO가 강한 기업을 만듦
- 4) “소유지분에 따른 경영권 행사” 주장은 기업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소유지분이 미미한 CEO가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소유지분이 높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
- 5) 시장거래의 투명성에 비해 기업의 내부경영 투명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

3) 공정거래법의 환골탈태: 경제력집중규제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

<30대그룹에 대한 경제력집중규제와 경쟁촉진정책의 비교>

	1987년 이후의 경제력집중규제 ¹⁾	경쟁촉진정책 ²⁾
목 적	독점의 폐해 교정과 경제민주화	독점의 폐해 교정
정책방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각종 기업 전략의 규제	경쟁의 촉진
정책수단	기업전략에 대한 개입 및 규제: 기업의 조직, 소유·지배구조, 출자 및 투자행위, 내부거래, 업종선택 및 다각화 규제 등	진입규제 철폐, 시장개방, FDI유치, 독점 및 경쟁제한적 행위규제, 신속한 퇴출제도의 정비 등
특 징	<p>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제가 국민경제의 발전 저해 → 정책집행의 어려움 발생 → stop-go 형태의 정책추진 불가피 (Time inconsistency) 경쟁제한적 결과 초래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 경쟁촉진으로 경제활력 유지 및 소비자복지 증대

주: 1) 독일, 일본,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2) 미국의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4) 기타 경제·사회부문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정책의 개혁

- 사회공적부조의 도덕적 해이 요소 최소화: 차별화에 기초한 공적부조 system의 개혁
- 교육평준화의 철폐/ 대학의 자율화 추진
- 노사관계의 정상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필요/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의 문제점 이해 필요
- 각종 평등주의적 시책의 재검토 및 철회
 - 산술적인 인위적 균형정책
 - 모든 정당의 획일적인 남녀동수의 정당명부제
 - 획일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
 - 획일적인 벤처기업 선정과 지원정책
 - 획일적인 대기업규제정책
 - 획일적인 농가지원정책
 - 차별화에 기초하지 않은 R&D 지원 및 국가혁신 시스템
 - 지방대 출신자를 위한 공무원 할당제
 - 부동산 과다 보유세 및 부유세 도입 논의
 - 서울대 폐지 주장 또는 국립대 평준화 주장

10. 결어

- 1) 불균형은 불균형정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 2)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